■ 여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작통권' 공방

여 "한 반대 농성은 균형잃은 코미디"
한 "정상회담서 거론 국익 도움 안돼"

여야는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둔 14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초선의원 10여명이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 것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열린우리당은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작통권 논의를 하지 말라며 야당의원이 농성을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논의해선 안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동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의식 없는 사대주의 당"

◇**열린우리당**=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철야농성과 지도부의 격려 방문을 놓고 "역사의식 부재", "이성과 균형감각을 잃은 블랙 코미디"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오늘의 모습이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한나라당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최만리'에 비유하면서 '사대주의' 정당으로 몰아붙였다.

이목희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농성에 대해 "냉전 수구세력이 길거리에서 총궐기를 하고 일부 언론이 연일 도배질을 하니까 균형감각을 잃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국민의 불안과 국익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성과 관련,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병이 많이 일어난다. 각계각층이 의병처럼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농성의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정기국회 중이어서 장외집회를 하기는 어렵지만 애국심을 가진 여러 의원이 자발적으로 국회 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고 감사히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애국심 가진 의원들이 농성"

◇**민주·민노·국민중심당**=각 당 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환수 시점을 못박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단순히 작통권 환수 문제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이란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작통권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낙후 호남에 국고지원 확대 지역간 복지양극화 해소를"

민주 지도부, 기획예산처에 촉구

민주당 지도부가 1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와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복지양극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중앙당을 방문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투입의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만을 고수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장기적,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과감한 예산배분을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어 "목포 신외항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새천년대교와 21년 전 시작된 흑산도 일주도로도 조기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복지예산의 지방 이양이 너무 빨리 이뤄진 상태에서 지역간 복지예산이 차등 지원되지 않아 (전남 등) 낙후지역의 복지사정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낙후지역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차등 지급을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낙후도에 따라 의무 배분토록 한 법률안에 정부도 그 취지를 알고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역별 복지 양극화 심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경제성장, 경제살리기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 현재의 수요 뿐만아니라 미래의 개발 잠재력을 반영하는 등 조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등과 관련 내년 예산에 2천100억원을 증액해 주도록 장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계속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보니 낙후지역에 대한 배정이 부족했다"며 "수도권 사업은 가급적 민자유치로 진행하고 재정지원은 낙후지역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등보조율 기준에 노령인구 등의 비중치를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시의회, 학교납품비리 조사

교육청·관련 학교 대상 한달간 실시
교육감 등 관계자 증인 출석 요구도

광주시의회는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달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의회는 하반기 의회부터는 시의원이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에 배치될 수 없도록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광주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및 비리관련 언론보도 학교이며,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16일까지 32일간이다.

조사내용은 신설학교 납품교구, 기자재, 가사실습실 등의 품목, 가격, 계약방법, 계약업체, 제품사양서 분석 등이며, 조사위원은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관련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12명이다.

조사위원회는 김원본 교육감과 안순일 동부교육장, 윤영월 서부교육장 등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하며, 위증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돼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연간 회의일수를 130일 이내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회의일수를 10일간 늘렸고, 의안 제출 기한도 당초 5일에서 7일로 늘려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현장방문 등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게했다.

시의회는 이 외에도 ▲2005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광주시의원 윤리 강령 조례안 ▲광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8명 기소

감사원 국감자료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감사원이 경찰 및 검찰에 수사 의뢰,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은 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군 강모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안군 김모씨 등 2명의 공무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흥교육청의 김모씨와 순천시의 추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정모씨는 세외 수입금 횡령으로 나주시 기모씨 등 2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횡령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만 기자 man21@

정가풍향계

복지시설 조사위 구성 제안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은 14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제1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또 이정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자고, 손재홍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광산의회 'FTA 중단안' 채택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전양복)가 광주·전남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14일 제139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졸속인 한미FTA 추진에 대한 노동자·농민·시민사회 단체 등 사회 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 전남도당 인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최인기)는 13일 수석 상임부위원장에 손기정 전 상임부위원장을, 상임부위원장에는 김상규 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사무처장에는 김철주(무안2), 정책실장에는 박흥수(순천1), 사무차장에는 김상봉(나주2) 전 남도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신임 당직자 임명을 계기로 10·25 재·보궐선거의 압승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건의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들은 14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광역의회는 5급 별정직 또는 계약직 보좌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권부서 인사권은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다며 간부직원 전원을 계약직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해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